

## 춘천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최우수 기관' 선정

춘천시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와 지역건설업계, 유관기관 등은 15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춘천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뽑고 시상했다. 또 원주시·평창군은 우수상을, 동해시·횡성

군·정선군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15일 도청에서 맹성규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건설협회 도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15일 노승락 홍천군수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

# “철새 쫓아달라”

## 조례 제정 등 강력한 제재 필요

### 강원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강원도내 건설업체들이 도에 '철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도는 15일 오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맹성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2015년도 하반기 강원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서 건설사 대표들은 '철새업체'에 대한 피해를 집중 거론하며 조례 제정 등의 대응책 마련을 건의했다.

박은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도지회 사무총장은

“타 지역 회사들이 강원도에 주소만 옮겨 놓고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강원도와 시군이 실태조사를 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흥균 대한측량협회 도지회장은 “홍천의 경우 측량 관련 분야 6개 업체 중 3개가 외지업체”라며 “이들은 사무실 문도 열지 않은 채 인터넷으로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회장도 “대부분의 철새업체들이 주소지만 옮겨놓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도내 업체란 기준을 명확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현행법상 철새업체를 가려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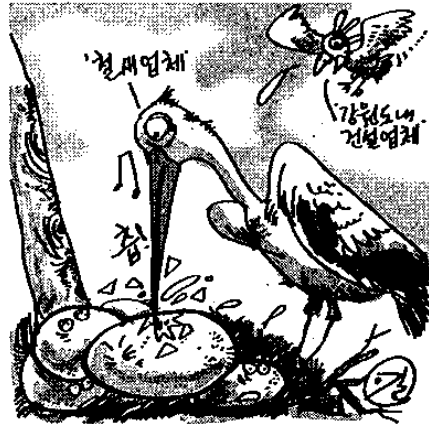
업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현창 도의원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업체에 피해를 주는 철새업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라”

고 도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올해 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춘천시(최우수), 원주시·평창군(우수상), 동해시·횡성군·정선군(장려상)에 각각 상금과 상패가 전달됐다.

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단장이우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김경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김철호)에는 도지사 감사패가 수여됐다.



## 홍천군 내년도 예산 4358억4000만원

홍천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4358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홍천군의회(의장 허남진)는 15일 제2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처리했다.

군의회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희망리 학다리에서 홍천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의 경우 투자 대비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며 12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지난 해 계획했던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재검토 의견에 따라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2건 15억원을 삭감했다.

한편 이날 2015년 제3회 추경심사에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홍천소방서 신축예산안은 부적절하다며 2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홍천/유주현

## 속초시 내년 예산 2595억원

### 시의회 심의 확정 올 보다 77억 증가

속초시 2016년도 예산이 2595억원(일반회계 2173억원, 특별회계 422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15일 2016년도 시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올 해 당초예산 2518억원보다 77억원(3.0%) 증가된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주요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166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원 △교육 38억원 △문화 및 관광 166억원 △환경 111억원 △사회 복지분야에 전년 대비 7.2%가 증액된 795억원이 편성됐으며 △보건 38억원 △농림해양수산 109억원 △산업·중소기업 56억원 △수송 및 교통 16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억원 △예비비·기타 447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모두 10개로 상수도사업 106억원을 비롯해 하수도사업 156억원, 공영개발 52억원,

의료급여기금 10억원, 농공단지 23억원, 주차장 7억원, 시설관리공단 65억원, 기타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모성경비와 선심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잠재적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의 안정기조를 발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



대한건설협회 도회, 홍천에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5일 오후 홍천군청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노승락 군수에게 전달했다.



건협 강원도회, 홍천군에 성금 5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 인철)는 15일 홍천군청을 방문, 노 승락 홍천군수에게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 公共공사 신기술 활용 늘어난다

## 내년 하반기 '발주자 감사 부담 줄인 개정법률'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기술 기피의 요인인 발주자들의 감사 부담을 덜어낸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진흥법(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에 대한 신기술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개정법률 핵심은 발주기관 소속 설계 및 계약사무 담당자들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 해당 기관의 손실을 유발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하는 조항이다.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고의나 과실만 없다면 신기술을 적용해 설령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해야 발주자들이 소신을 갖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창조경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진작에 단행했어야 할 우리 신기술 업계의 숙원이 이번에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건진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신기술의 건설공사 우선 적용 조항도 상위법인 건진법에 명시됐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신기술 자체가 경제성까지 충족할 기술임을 감안하면 면책 조항과 더불어 활용 촉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신기술 설명회는 물론 발주기관에 대한 활용 촉진 공문, 나아가 '정부에서 첫 고객 되어주기'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활용 촉진에 나섰던 국토교통부의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전년(4706억원)보다 10%가량 줄어든 4238억여원에 머무는 등 활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속단하긴 이르지만

단기적 경제성, 즉 예산절감에 집중된 감사 때문에 신기술 활용을 주저했던 발주기관의 고민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장 적용성 평가를 받지 않아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특허보다 푸대접을 받은 건설신기술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연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새 '관로지원법'도 중기가 대부분인 신기술업계의 시장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다.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새 '기술사법'도 다르지 않다.

기술사의 업무 범위를 공공 안전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공사 발주 때 공공안전을 위한 기술사를 우선 활용토록 한 조항들이 기술로 특화된 벤처형 소기업이 대부분인 기술사사무소의 경영난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김국진기자 jinny@